

제 **21** 호 2018년 하반기
(2018. 7. 1.~ 2018. 12. 31.)

의정소식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구민 복리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CONTENTS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 04 발간사
- 05 의원 현황 및 정수
- 06 북구의회 연혁 및 조직
- 07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주요 의정활동
제174회 임시회
제175회 임시회
제176회 임시회
제177회 임시회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 2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27 현장속으로
- 33 결의안,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 50 2018년 하반기 포토 의정
- 59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표지설명 | 울산안전체험관

발행일 | 2018년 하반기, 제21호
발행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편집인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장
발행처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전화 | 052-241-8973
홈페이지 | <http://council.bukgu.ulsan.kr>

| 발 | 간 | 사



21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의장 이주언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제7대 북구의회가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출발하여 어느새 2018년 하반기 임기가 훌쩍 지나고 2019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 북구의회 전 의원은 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구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조례를 정비하고, 정례회, 임시회, 현장 활동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구민의견을 의정에 반영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북구의회는 구민여러분들과 함께 뛰며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들의 내실을 다지고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한 폭넓은 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서민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 일에 앞장설 것이며 당면한 현안들도 세밀하게 챙겨 구민이 행복해 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풍요와 복을 상징하는 기해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뜻하는바 모두 이루시고 행복한 일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이 주 언

의원현황 및 정수

□ 제7대 [전반기] 북구의회 의원현황



의 장

성 명 이 주 언

연락처 010-9173-4432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튼튼한 북구의정으로 기분좋은 결과로
보답하는 북구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부의장

성 명 백 현 조

연락처 010-3801-8364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늘 그랬듯이 이웃같은 구의원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성 명 임 채 오

연락처 010-4844-5405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구민이 최고입니다.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의 원

성 명 박 상 복

연락처 010-8630-4918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주민의 편익이
향상되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의 원

성 명 정 외 경

연락처 010-6625-7725

선거구 농소2·3동

초심, 열심, 지심으로 더 많은 행복을 만드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의 원

성 명 이 정 민

연락처 010-3123-3387

선거구 농소2·3동

주민에게 다가가고 주민에게 사랑받는
북구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의 원

성 명 임 수 필

연락처 010-6227-0049

선거구 농소2·3동

노동자 서민의 직접 참여정치가 희망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의 원

성 명 이 진 복

연락처 010-4228-8986

선거구 비례대표

북구민의 이익을 지키며 겸손하고 착실한
심부름꾼으로서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 의/원/정/수

계	가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나선거구 (농소2·농소3동)	다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8	2	3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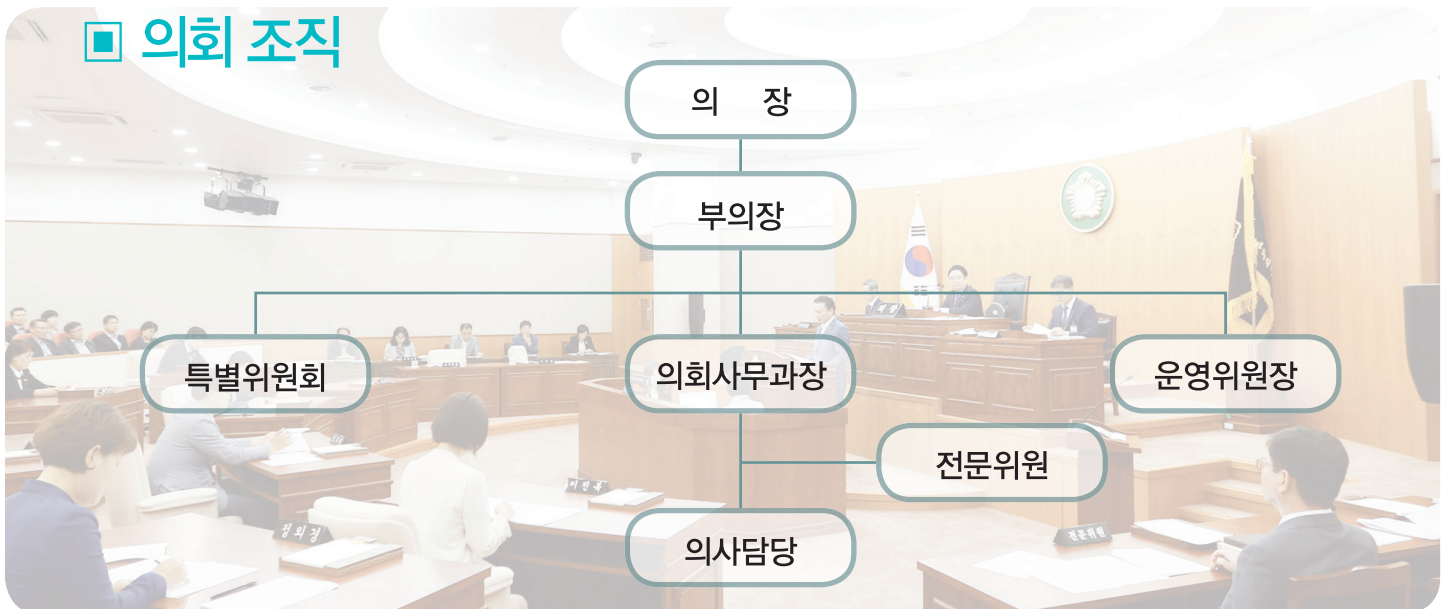
북구의회 연혁 및 조직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1997. 7. 15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1998. 3. 1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1998. 7. 7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0. 2. 21 송정동 의원 사직(7명)
- 2000. 6. 8 송정동 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2. 7. 9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4. 7. 1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4. 7. 1. ~ 2018. 6. 30.
-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8. 7. 1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2018. 7. 1. ~ 2022. 6. 30.



의회 조직



회기운영 현황 (2018. 7. 1. ~ 12. 31.)						
구 분	계		임시회		정례회	
	회수	일수	회수	일수	회수	일수
2018년 하반기	6	73	4	26	2	47

안전처리 현황											
회 수	일 수	계	예산안	결 산	조례안	동의안 (승인)	결의안	보 고	질 문	5분 자유발언	기타
제174회 (2018.7.2.)	1	4	0	0	0	0	0	0	0	0	4
제175회 (2018.7.17.~7.26.)	10	22	0	0	15	0	0	1	0	3	3
제176회 (2018.8.20.)	1	1	0	0	0	0	1	0	0	0	0
제177회 (2018.8.28.~9.10.)	14	14	1		1	1	0	0	1	3	7
제178회 (2018.10.5.~10.19.)	15	20	1	1	3	1	0	0	1	3	10
제179회 (2018.11.20.~12.21.)	32	42	3		22	6	1	1		3	6
합 계	73	103	5	1	41	8	2	2	2	12	30



의정활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74회 | 임시회 (제7대 북구의회 개원) 2018. 7. 2. (1일간)

북구의회는 7월 2일 제174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주언 의원, 부의장에 자유한국당 소속 백현조 의원을 각각 선출하며 의장단 구성을 완료했다.

북구 가선거구(농소1, 강동, 송정동)에 당선된 이주언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대외협력국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북구 다선거구(효문, 양정, 염포동)에 당선된 백현조 부의장은 제6대 북구의회 의원을 역임한 재선의원이다.

이주언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제7대 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울산 북구의 가치를 보다 높게 만드는 것이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가장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75회 | 임시회

2018. 7. 17. ~ 7. 26. (10일간)

제175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7월 17일 개회를 시작하여 7월 26일까지 10일간 회기가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구정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을 처리하였다. 강동문화센터 조성현장 등 관내 주요 현안사업 현장방문과 더불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등 주민안전 점검에도 힘을 쏟았다.

임시회 개회식에서 임수필 의원은 ‘주민참여형 놀이터를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박상복 의원은 ‘제7대 임기를 시작하며’라는 주제로, 이진복 의원은 ‘제7대 북구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며’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의정활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76회 | 임시회

2018. 8. 20. (일간)

북구의회는 8월 20일 제176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결의문에서 “북구는 월성원자력발전소로부터 17km 이내로 인접하여 중수로형 원전의 특징인 삼중수소의 일상적 배출로 인해 상시 피해를 받고 있는데다가,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다량 발생하기에 임시로 저장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재앙적 사고위험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리방안 마련에 있어 지역주민의 범위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울산의 경우 24~30km)을 원자력발전소 주민의 공식범위로 지정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 방안 없는 상태에서의 임시 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반대하며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77회 | 임시회

2018. 8. 28. ~ 9. 10. (14일간)

제177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열렸다. 이번 임시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였고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개회식에서 임수필 의원은 ‘윤종오 전구청장에 대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 4억여원은 면제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이정민 의원은 ‘농소2동 운동장 건립 조기에 추진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의정활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78회 | 제1차 정례회

2018. 10. 5. ~ 10. 19. (15일간)

제17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심의·처리하였다.

개회식에서 박상복 의원은 ‘강동동 현안문제에 강력한 대처를 촉구합니다’라는 주제로, 임수필 의원은 ‘울산 북구도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폐회식에서는 임수필 의원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였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79회 | 제2차 정례회

2018. 11. 20. ~ 12. 21. (32일간)

제17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정례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총 8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67건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달천 철장 활용한 문화콘텐츠 적극 개발, 야외 물놀이장 관리 일원화, 미세먼지 저감 관련 대책 마련, 지진 및 각종 재난 대비 철저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당부하였다.

2019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3.98% 증가한 3,140억 8,175만원(일반회계 3,119억 4,833만원, 특별회계 21억 3,342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1건, 2억 4,86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심의의견서를 통해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요 안건처리 현황

제174회 |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제175회 |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8년 기준인건비 증원인력 범위 내 인력 조정하고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명칭 변경하고, 업무이관에 따른 국 단위 분장사무 조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행사 지원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 조항 신설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인 쉬운 용어로 정비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호적법상 용어를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호계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찾아가는 상담 및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복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 임기의 연임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및 장애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문구 수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 임기의 연임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및 장애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문구 수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백현조 의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중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급식지원의 기준 ·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아동수당법」 시행 및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착한가격업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 실현 및 감량추진, 공공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RFD)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및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제176회 | 임시회 주요 안전처리 현황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임수필 의원]**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 방안 없는 상태에서의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반대하며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제1원칙으로 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촉구함.

제177회 | 임시회 주요 안전처리 현황

●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소금포 역사관 조성 외 1건의 변경 계획에 대하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얻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근거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를 위한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제178회 | 제1차 정례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원안가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기존 오프라인만이 아닌 온라인(소셜네트워크서비스)을 같이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의 소식을 알 수 있도록 객원기자 조항을 삭제하고 'SNS 서포터즈'를 구성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염포운동장 및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무릉운동장 폐장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 「경관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북구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경관자원의 보존과 체계적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수립 중에 있는 '북구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제179회 | 제2차 정례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19년도 예산안 ▶ 수정가결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

● 201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함.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 취소 계획에 대하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얻고자 함.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구 전체의 인력 및 조직운동을 위한 가용인력 확보와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놀이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통장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사항, 발급권자와 발급·재발급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 원안가결

※ 2019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세무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 및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개정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수반되는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고충·질의민원,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위한 민원 전담부서 신설하고, 사업소 신설, 세무과 분리 등 주민 수요에 맞춘 행정기구 조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주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탄력적 정원 운영을 위한 개정 조례임.

●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연구용역사업의 사전심의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후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로 소송·법률자문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함으로써 소송 수행의 전문성 확보 및 자문의 신속한 답변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개정(2014.5.28.)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18.12.31.)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일괄로 신설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첫째자녀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설에 따른 용어 정의, 지원기준 수정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동협력기구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국내외 아동복지 관련 선진사례를 구정에 접목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이주언 의원]

※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의 주체로서 국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 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명칭의 형식이 달라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청소년지도위원 추천권한을 지역현안에 밝은 동장으로 지정하여 구·동·민간(청소년지도위원) 협력체계를 긴밀히 구축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시장 사용권의 상속 승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공설시장에 대한 화재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화재발생 시 생업복구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 청년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전문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2019년 신규 퇴직(예정)자 교육 프로그램인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 전문가 양성교육」 민간위탁으로 시행함에 앞서,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의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농어업재해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수별 복구비 지원금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제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공동주택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되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및 소형폐가전제품의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의 받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쓰레기 불법소각·투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해 건전한 신고 유도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 신고를 차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상위법령 개정내용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 원안가결 [백현조 의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관내 북부소방서의 개청과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 등에 따라 현황과 맞지 않는 관련 조문을 개정 및 정비하여 통합방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 원안가결**

※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임채오 의원 외 3명]**

※ 관내 소재하는 공동주택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비원, 청소원 등 근로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박상복 의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북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조례 정비 및 신설, 용어 정비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 심의보류 [임수필 의원]**

※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에 대하여 국회비준동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 임.

●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면제 청원의 건 ▶ 원안가결 [임수필 의원]**

※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통하여 면제 하고자 하는 청원 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목적 2018년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기간 2018. 11. 21. ~ 11. 29.(9일간)

| 감사결과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84	17	67
공 통 사 항	2	1	1
기 획 홍 보 실	4	1	3
행 정 지 원 국	26	3	23
복 지 경 제 국	26	8	18
건 설 도 시 국	21	4	17
보 건 소	3	—	3
의 회 사 무 과	2	—	2





행정사무감사 |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백현조 부의장



임채오 의원



박상복 의원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 수립 철저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 및 집행액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 등이 있으니 계획 수립시 구체적 이행계획, 자원 조달방법, 실현 가능성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주기 바람.

아동급식관련 사업 추진 철저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시 타구의 사례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지원횟수 및 급식단가 등 인상요인이 있는지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기 바람, 해당 식당의 옥외 가격 표시, 어린이급식 카드를 학생증·청소년증으로 발급 방법을 다른 대체 수단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대상 아동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여 주기 바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추진 철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건물 신축 시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arrier-Free)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장애인이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기 바람.

도시개발지구 민원 사항 적극 수렴

진장·명촌 지구, 강동산하지구, 호수지구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기 바람, 최소한의 민원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불편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기 바람.

기간제근로자의 구민 우선 채용 건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분야의 경우 동등한 자격 조건이라면 구민 중에서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우리구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을 위하여 온로드 테스트장에 비해 예산 수반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프로드 테스트장 건립을 강동지역에 설치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튜닝산업의 발전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주기 바람.



정외경 의원



이정민 의원



임수필 의원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93개 각종 위원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위원회 구성 이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일부 위원회의 경우 실제 회의 개최가 필요함에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임.

청사 에너지 절약 시책 지속적인 추진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 기자재로 공급하는 등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기 바람.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현재 교류중인 자매결연 도시들은 지속적인 교류가 어려운 실정이나, 신규로 지역의 산업, 지역특성상 자동차와 연계된 도시들을 모색하고 선정 하여 교류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중산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철저

조성단계부터 주민참여형으로 잘 진행해 주었으며, 향후 운영 시 놀이활동가, 공원지킴이 등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도 검토하여 주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하여 주기 바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실질적인 운영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 심의는 자제하고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남북교류 사업 등을 논의하고, 북한이탈주민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결연 추진도 검토하기 바람.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2003년에 설립되어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상생의 노사문화의 모범이 되어 주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이진복 의원

달천철장 활용한 문화콘텐츠 적극 개발

달천철장 정비사업이 관리시설을 제외하고 완료되었지만 주민들의 불거리가 부족하고 가족들이 체험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음. 타 박물관과 전시관 등을 벤치마킹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도심 속 주민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호계천 인근 손바닥정원 주변 정비

호계천 일원 손바닥정원의 설치 후 간판 및 주변 정비가 이루어 지지 않은 사항이 있으며, 해당 지점에 대하여 정비하여 주시고, 다른 장소에 대해서도 환경을 점검하여 개선하여 주기 바람.



현 | 장 | 속 | 으 | 로



강동문화센터 건립 현장,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 현장 점검

북구의회(의장 이주언)는 제175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7월 20일 관내 주요추진사업인 강동문화센터 건립 현장,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의원들은 사업현장을 둘러보면서 “고대 철기문화의 상징인 달천철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함과 더불어, 여러 콘텐츠를 활용하여 앞으로 북구의 상징적인 역사문화시설로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또한 강동문화센터가 지역 주민의 여가문화를 선도하고 활용도가 높은 문화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제반사항을 면밀히 살펴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방문, 주민안전 점검

북구의회(의장 이주언)는 7월 24일 오후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제센터 운영현황 전반 및 성과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구의회 전 의원들은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파악 및 실제상황 시연 등을 통해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을 적용한 CCTV 카메라와 비상벨을 이용한 범죄상황 대처에 특히 관심을 보였으며, 스마트빔을 활용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주언 의장은 “구민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가치이다”고 강조하며, “더욱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CCTV 인프라 확충은 물론 더욱 효과적인 운영 체계를 통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당부했다.

현 | 장 | 속 | 으 | 로



어르신 배식 자원봉사활동 및 풀베기 현장체험 봉사활동

북구의회(의장 이주언) 의원들은 추석을 맞아 9월 10일 오전 관내 복지시설인 북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르신 행복식당 배식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추석 전 주요민원지역을 해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북구를 만드는데에 보탬이 되고자 9월 17일에는 강동산하지구 주변 풀베기 현장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잡풀이 많이 자라 풀베기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강동초교 주변 및 도로변을 직접 둘러보고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였다. 이주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여해 풀을 베고 주변 환경정비를 하여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북구의회(의장 이주언) 의원들은 9월 18일 오전 관내 복지시설인 엘림종합복지센터와 양정느티나무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과일 및 생활용품 등을 추석 위문품으로 전달하였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추석을 맞이하여 관심과 온정이 그리운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 | 장 | 속 | 으 | 로



자율방범대와 현장 순찰 활동

북구의회(의장 이주언) 의원들은 10월 23일 저녁 농소3동 자율방범대와 함께 농소3동 지역 방범 순찰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활동은 매분기마다 추진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의원들이 직접 관내 순찰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봉사하는 대원들의 노고를 함께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또한 지속적인 방범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방범대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청년 제조업 창업 공간 조성 사업 추진 현장 방문

북구의회(의장 이주언)는 제17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11월 29일 호계동 소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달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을 탈바꿈하는 청년 제조업 창업 공간 조성 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 날 이주언 의장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물 매입으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면 좋겠고 청년 제조업 창업 공간 조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결·의·안

결의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 > 발 의 자 : 임수필 의원
- > 의 결 일 : 제176회 임시회(2018. 8. 20.)
- > 결의요지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안

■ 제안이유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부터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한 '재검토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22일 12차 회의에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위원회'의 구성, 권한, 위상 등 운영원칙과 운영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임.

나. 울산, 특히 북구의 경우는 대부분 지역이 월성원자력발전소로부터 17km 이내로 인접하여 중수로형 원전의 특징인 삼중 수소의 일상적 배출로 인한 일상적 피해를 받고 있는데다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다량 발생으로 재앙적 사고 위험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음.

다. 이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마련에 있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를 원자력발전소 주민의 공식범위로 지정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 방안 없는 상태에서의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반대하며 현재대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제1원칙으로 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촉구함.

■ 주문

지난 5월부터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주관부처로 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한 '재검토 준비단'(15명 : 단장1, 정부3, 지역5, 시민사회3, 원자력3)을 운영하고 있다. '재검토 준비단'은 이후 본격 진행될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위원회'의 구성, 권한, 위상 등 운영 원칙과 운영계획 등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8월 22일 12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현재 '재검토 준비단'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까지의 관리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제반의 결정과정 설계와 더불어 월성원자력발전소내 저장용량의 포화(2020예상)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결정과정 설계, 의제의 선후, 주민의 범위, 의견수렴 방법 등을 둘러싸고 논쟁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자력과 에너지전환을 선언했고, 그동안 묵혀두었던 과제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시킬 때이다.

그리고 그 원칙은 현재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이어야 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물질로써 핵발전을 운영하는 전 세계 31개국에서 최종처분장 건설을 추진하는 국가가 핀란드밖에 없을 정도로 위험 그 자체이며, 그마저도 10만년 이상이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 와 의혹의 영역이다. 결국 현재대의 편안한 전기소비를 위해 미래세대에 재앙의 위험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셈이다.

울산, 특히 북구의 경우는 대부분 지역이 월성원자력발전소로부터 17km 이내로 인접하여 중수로형 원전의 특징인 삼중 수소의 일상적 배출로 인한 일상적 피해를 받고 있는데다가,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다량 발생하기에 임시로 저장하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의 증가로 인한 재앙적 사고 위험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울산북구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울산북구의원 일동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마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범위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울산의 경우 반경 24~30km)까지의 주민임을 확실시 하며, 이를 관찰시킬 것임을 결의한다. 북구는 월성원전 직접 영향권 내 지역주민 당사자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문제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행정구역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울산북구는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경주시내보다 더 가까울뿐더러 북구 전 지역이 방사선비상 계획구역에 속한다. 그만큼 북구주민은 월성원전의 직접 이해 당사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적인 행정구역의 관점을 벗어나 실제적인 영향 지역으로, 국제기준이자 법적 기준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를 원자력발전소 주민의 공식범위로 정하고, 주민의견수렴의 과정에서 북구주민과 북구청, 북구의회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자칫 정부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주민에게 떠넘겨 주민간의 갈등만을 불러 일으키는 오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둘째. 울산북구의원 일동은 북구주민의 안전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 방안 없는 상태에서의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

현재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처분장과 최종처분장 공론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최종처분장 대책 없이 월성과 영광 등 각 원자력발전소 부지별 최인접 지역 주민 의견을 물어 건식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여부를 결정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포화

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간식 임시저장시설'을 늘려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역과 인근지역은 원자력발전소 사고위험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보관 증가로 2중의 위험에 처한다.

그러므로 북구의회의원 일동은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장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임시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려는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은 지반과 지질 등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되지 못하다면 시급히 월성원자력발전소 2~4호기의

조속한 폐쇄 로드맵을 짜야 한다.

정부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전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어떻게 최종 처분할 것인지 대책을 먼저 제시하라. 또한 현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은 사실상 '중간처분장'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허술한 '원자력발전소 관계시설'로 규정하지 말고,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북구의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방안이 북구주민과 울산 시민의 안전을 넘어 전 국민의 안전과도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안전한 울산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구.정.질.문

결의안,
구정질문,
서면질문

- > 질문의원 : 임수필 의원
- > 질문일시 : 제178회 제1차 정례회(2018. 10. 19.)
- > 질문요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Q. 제168회 임시회에서 전임 구청장님의 답변을 보면 '9월 중 직무분석을 마치는 대로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전환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규직 전환심의회가 완료된 것은 올해 5월이었고,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북구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우리 구는 2017년 7월 20일자「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발표 이후, 300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직무조사를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실시하였고, 같은 해 12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울산광역시 북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전환심의위원회는 2차례 심의를 개최하여, 2018년 2월, 4개 직무, 7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였고, 결정인원에 대해 정규직 채용절차 등을 거쳐,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전환인력에 대한 부서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기관 및 근로자 대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의 협의와 결정으로,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용역 근로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전환 협의기구의 협의자료 작성을 위한 각 부서별 용역 근로자 실태조사를 1차적으로 완료하였고, 현재는 마무리 단계로 부서별 실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용역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있어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 방식, 시기 등을 결정하되, 이번 정규직 전환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듯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향후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용역 근로자의 실태를 파악 등 신중히 사전 준비 중임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 우리 북구청에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렇게 우리구의 전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가이드라인은 금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대규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권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일임함과 동시에, 정규직 전환 예외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사회양극화 해소와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표명과 직업기회 형평성 문제,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인건비 증가에 따른 대주민 정책사업비 감소, 공공부문 유연성 저하 등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가 동시에 고민되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어렵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임수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규모가 일부 전환규모가 큰 지자체와 비교할 경우,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관별 특성 및 다양한 사정상 지자체 상호간의 확실적인 비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사회적 우려들을 고민한 「울산광역시 북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권한있는 결정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얼마전 울산시 교육청은 661명중 65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회양극화 완화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북구청장께서도 노동친화정책과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앞선 구청장님과는 다른 이동권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간제, 파견, 용역, 민간위탁 부문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책과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고, 용역 근로

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협의에 있어, 노·사 당사자 및 이해 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고 협의기구가 심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의 정당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수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사례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구 전환 협의기구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매년 자치단체 공무원지부 북구지회와 교섭을 통해서 임금 및 복지부문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구 무기 계약직의 처우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정여건, 직무난이도,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무기 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면·질·문

결의안,
구정질문,
서면질문

- > 질문의원 : 박상복 의원
- > 질문일시 : 제177회 정례회(2018. 9. 3.)
- > 질문요지 : 동대산 풍력발전 재추진건 관련 질의

동대산 풍력발전 재추진건 관련 질의

Q. 북구청은 최근의 언론보도 관련, 동대산 풍력발전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A. 현재 동대산 풍력발전사업 관련하여 해당사업자로부터 우리 구에 어떠한 신청이나 협의한 바도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언론에 보도된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재추진에 대한 사항은 북구청의 의결과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Q. 또한, 정부나 울산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동대산 및 강동인근 풍력발전을 추진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A. 동대산풍력발전의 경우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기존의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재추진에 대

한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강동인근 풍력발전의 경우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현재 SK건설(주)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2017. 10. 전기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전기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전사업의 경우 대체로 정부나 시 등 관주도로 직접 추진하지 않고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적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구 소관 인·허가시 관련법 적법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Q. 임기내 재생에너지 관련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인지 및 울산시나 정부와 협의 중인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A. 우리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단독주택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공공청사 여유공간 등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

결의안,
구정질문,
서면질문

- > 질문의원 : 박상복 의원
- > 질문일시 : 2018. 11. 8.
- > 질문요지 :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관련 질의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관련 질의

Q. 복구청은 여러 차례 18년 말까지 준공 승인을 약속한 만큼 약속 이행이 가능 한지?

A.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합이 주도하여 07년 1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이며, 1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조합측과 매월 2회 공정회의를 개최중이며 지속적인 현장확인 및 독려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을 위해서는 우리구의 행정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합 및 시행사측의 사업준공을 완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확정측량 등에 따른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의 행정절차 이행과 폐기물처리비용, 하수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 그리고 예비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이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위의 사항이 이행되면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는 준공검사 신청을 하고 공공시설물 관련부서의 준공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또한, 현재 시점 예비준공검사 보완 사항은 무엇이며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A. 18년 3월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예비준공검사를 시행한 결과 가로등, 도로, 가로수, 공원 등 8개부서 90건에 대하여 보완 및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보완사항 이행을 위하여 시공중이며 10월말 공정보고시 침사지 및 우수박스, 중앙공원, 완충녹지 등의 조경 보완공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는 11월 중 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 포장 등의 추가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준공 전까지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 할 것 인지?

A. 가로등 점등, 각종 생활 쓰레기 및 청소 문제, 불법 주정차, 노점상 점유 등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설물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처리 한계는 있으나, 우리구 담당부서 및 도시개발조합 측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사업 준공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5분·자유발언

결의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 > 발언의원 : 임수필 의원
- > 발언일시 : 제175회 임시회(2018. 7. 17.)
- > 발언요지 : 주민참여형 놀이터를 만듭시다.

> 주민참여형 놀이터를 만듭시다.

기존의 정형화된 놀이터를 벗어나 아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키워 주는 놀이터, 아동과 주민,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놀이터'를 조성하자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울산 북구의 대부분의 놀이터는 정형화된 놀이터로 모든 놀이기구가 세팅되어 있고, 놀이터의 주인인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된 놀이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참여형 놀이터'는 놀이터를 이용할 아동과 주민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스스로 디자인 하며 놀이터 조성 설계에서 감리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참여형으로 조성된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의 경우 이미 3개가 개장되어 운영 중이며, 올 가을이면 네 번째 놀이터가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에는 평일에는 200여명, 주말에는 5~600여명의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찾아와 2~5시간을 놀다간다고 합니다. 얼마전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놀이터를 참여형 놀이터로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만들고 싶은 놀이터를 디자인하게 하고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돌아보며 직접 감리하게 하는 등 전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켰다고 합니다.

전국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앞 다투어 참여형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인구 천명당 출생아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울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젊은 도시입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가보면 젊은 부모들과 영유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 만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젊은 부모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해마다 기존의 놀이터를 3~4개 가량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지만, 주민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주민들의 관심도 떨어지고, 조성된 후에도 그렇게 주민 호응도가 높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북구에도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이나 놀이터를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기적의 도서관 옆에 위치한 중산어린이공원의 경우 주민참여형으로 만들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만큼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을 잠시 멈추고,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해 나갈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번에 추진중인 중산어린이 공원 사업을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틀을 만들어 가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봅시다. 어쩌면 초기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힘들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귀찮고 짜증날 수 있지만 주민들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를 잘 해나가는 과정에서 주민참여형의 모델이 만들어 질 것이고 북구 주민들의 주인의식은 더욱 높아 질 것입니다.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직접 참여입니다. 시대정신에 맞게 이동권 북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북구주민들과 함께 멋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갔으면 합니다. 덧붙여 북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지난 민선5기 구청장님 시절 행정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피해를 보신 주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처 북구 전체를 살펴보는 못했지만 제가 거주하는 농소3동에 가슴을 쥐어짜는 아픔을 간직하고 행정을 불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홈플러스 앞 모델을 눈앞에 두고 살아야하는 헤니언하우스 주민들과 시례사터~상안사터 소방도로 개설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마을 주민들입니다. 신임 이동권 북구청장님께서 농소3동 주민뿐만 아니라 혹시나 모를 북구 곳곳을 살펴보고 지난 시기 행정의 잘못으로 가슴 앓이 하시는 주민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결의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 > 발언의원 : 박상복 의원
- > 발언일시 : 제175회 임시회(2018. 7. 17.)
- > 발언요지 : 제7대 임기를 시작하며

> 제7대 임기를 시작하며

회사생활만 하던 정치초년생이 지역주민의 도움과 관심으로 복구를 위해 일할 기회가 생긴 것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정책이나 자신의 소신이 아닌 타 정당 비판만으로 주민을 대표하겠다는 정치현실도 경험했습니다. 이게 우리 정치의 현실 일수도 있지만 민생정치/생활정치를 실천하는 건전한 지방정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먼저, 집행부께 건의 드립니다.

첫째, 정치나 경제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난 집행부의 사업들이 무리하게 축소, 변경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역 사회에 일관성 있는 추진사업 이행을 통해 주민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치적 신념과 단편지식에 의해 내린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후유증을 낳을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측 가능한 업무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북구지역 인구 증가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많은 주민이 집값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집값 하락을 국가 전반적인 '경기 불황 때문이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인식에서 탈피하여 북구청 차원의 고민을 당부 드립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해 6월까지 집값 하락이 동구가 지역경제 기반 몰락에도 4.12% 수준이며, 이 보다 더 높은 곳이 북구(4.79%)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력 산업 침체 및 구매력 감소, 아파트 과잉공급 때문이라는 두리뭉실한 원인분석 보다 손에 잡히는 대책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체 인원의 40%가 우리지역 북구(*중구 21%, 남구 20%, 동구 8%, 경주 6%, 울주군 5%順)에 거주자 중이며 5년 이내 기술직 중심으로 8천명 이상의 정년 퇴직자가 발생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공동체를 함께한 중견/중소기업 협력사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울산 북구에 정주하고픈 매력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퇴직 이후 경주나 울주군 등 북구 근교 생활권에 정주희망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등 향후 경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집값 상승의 호재는 한계에 부딪힌 만큼 북구에 지속 정주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한 양산시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1.4명, 인구 증가 4위로 우리 북구에 암시하는 바는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셋째, 국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전기/수소차 등 환경차 비중이 6.2%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8만대에 육박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의 준비는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내연기관 중심의 많은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연구개발 부문 역시 연구인력을 충원하기 쉬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플러를 생산 하는 관내 중견기업인 세중공업이 환경차시대 도래시 머플러는 필요 없는 부품이 되어 생존할 수 없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를 둘러싼 수많은 협력사는 또 어찌하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양산전용 공장을 만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있음에도 수소 충전소가 관내에 하나도 없어 남구 매암동, 옥동으로 다니는 실태입니다. 과연 북구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도래하는 환경차 시대를 준비하여 건강한 자동차 부품 생태계를 다시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셈법보다 원칙과 기준의 준수, 관련 부문 중재/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동조합은 이익 단체의 하나로 노동자의 복지를 포함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 합니다. 주주 및 부품업체, 소비자, 금융권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 중 노동조합의 역할만 강화 된다면 다른 이해관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은 시장이 정한 그 이상의 보상을 요구 할 경우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북구는 매년 여름은 시장이 정한 보상과 배분을 놓고 노사가 치열하게 대립합니다. 문제는 실패를 경험하고서도 개선의 여지 없이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 된다는 점입니다. 노사문제를 개별 기업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고민하여 지원하는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느 식당의 사장님은 '북한의 핵미사일 보다 현대자동차 파업이 더 무섭다' 라고 합니다. 파업이 미치는 사회적 비용을 표현하는 단적으로 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역에서 가장 사랑 받아야 할 기업인, 근로자가 지역민의 비토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수의 가치는 올바른 룰을 바탕으로 한 공정함과 배려입니다. 공정함을 위해서는 올바른 규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올바른 규칙이 있더라도 불이익을 보는 노인, 아동, 비정규직, 몸이 불편한 사람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배려를 도입하여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북구의회는 올바른 규칙, 다시 말해 어느 누구에게도 특혜가 없는 공정한 조례를 만들며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해서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 제언해야 합니다.

현재 울산시장님 등 새로이 출발한 당선자들은 탈권위주의를 표방하고 특권익식 내려놓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구청장님 역시 공식행사의 일반출장시 업무효율성이 높은 SUV차량을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가까운 양산시장께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관용차로 운영 등

탈권위주의를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 시장님 역시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개개인의 역량보다 문재인 정권의 중앙 바람에 따른 승리라고 자명한 만큼 '검소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 대신 실천이 우선시 되어야만 변화를 요구한 지역주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여론의 지탄이 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북구의 회 의장단은 품위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대폭적인 삭감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의회 역시 관용차를 유지비가 저렴한 차량으로 교체하여 어려운 북구 경제사정을 함께 나누어, 주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길 제언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를 조려화 함으로서 주민의 눈높이에 보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내부에서 상처 난 곳에 소금을 문지르는 행위는 하지 말았음 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주민의 선택을 과도하게 받은 정치 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이 공존합니다. 선거인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로만 사회적 통합, 소통을 외칠 것이 아니라 북구의회

내부에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함께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이 된 세력이 그렇지 못한 세력에게 또 다시 적폐, 급진진보라는 프레임으로 야당 정당들의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지 말았음 합니다. 의원이 집행부의 수행비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정치목적은 오직 북구주민을 바라보고 북구민의 편익 향상 일 것입니다. 이런 정치 목적달성을 위해 가는 길이 조금 다를 뿐이지 중앙 정치의 이념투쟁, 편가르기 정치보다 의회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 이끌어 내야 합니다.

초선이 중심이 된 의회다 보니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와 의욕만 앞서고 내용이 없는 빈 수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공존합니다. 바보가 박사인양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 그룹을 통제 할 때 그 결과는 뻔합니다. 의회 스스로 공무원을 포함한 전문가 집단과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의원 능력을 키워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각 부문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제7대 북구의회는 4년 후 '참 괜찮았다'라는 평가를 듣는 성공하는 의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5분·자유발언

결의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 > 발언의원 : 이진복 의원
- > 발언일시 : 제175회 임시회(2018. 7. 17.)
- > 발언요지 : 제7대 북구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 제7대 북구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저의 비전은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으로서 국민 누구라도 낯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우리 북구도 6.13 지방선거를 통해 보다 민주적인 북구,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북구를 주민들이 원했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부여한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이 저의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의회도, 나아가서는 우리 의회 의원 모두가 공동의 책무로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혁신해야 합니다. 아편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동안 북구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북구가 추진해온 정책은 성과와 함께 분명한 한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깨끗한 의정활동, 검소한 의정활동이라는 실천목표를 가지고 집행부에는 매의 눈으로 구정을 살피고, 지역구인 20만 북구주민에게는 더 낮은 자세로 끝없이 소통하고, 가슴 따뜻한 정치를 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갑시다. 관행과 제도를 바꿔나갈 일은 그것대로 의회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어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은 우리 모두 서로 도와가며 바꿔 나갑시다.

민주주의가 정치 사회 경제의 제도로써 정착하고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북구는 숭한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만들어 놓은 지역입니다. 저는 제 7대 북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5분·자유발언

결의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 > 발언의원 : 임수필 의원
- > 발언일시 : 제175회 임시회(2018. 7. 25.)
- > 발언요지 : 핵발전소 사고 방사능방재대책 전면 재수립 및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소 건설을 반대 합니다.

> 핵발전소 사고 방사능방재대책 전면 재수립 및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소 건설을 반대 합니다.

인구 20여만 명이 살고 산지로 둘러싸인 후쿠시마 핵발전소 4기가 단 한차례의 지진으로 전 국토를 재앙의 땅으로 몰고 간 사례는 먼 나라의 일이나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재앙은 이미 실증되었습니다. 120만명이 살고 있고 대단위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울산 주변 핵발전소 12기는 단 한차례의 지진에도 후쿠시마보다 훨씬 가혹한 재앙을 몰고 올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발생한 경주 5.8지진과 포항의 5.4지진은 더 이상 울산과 주변지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고 60개가 넘는 활성단층대 위에서 가동되는 핵발전소는 울산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월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는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주무부서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전시설 점검과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 결과 15개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원자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두께 측정방식 불합리
- (2) 원자력 발전소 시설물 내진대책 미흡
- (3) 고리원자력발전소 해안방벽 등 침수예방대책 미흡
- (4)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자격관리 부적정
- (5) IAEA OSART 미션 수검 관리 미흡
- (6) 설계수명기간 만료 원전 계속운전제도 절차 불합리
- (7) 해외 원자력안전기준 검토·반영 등 규제관리 불합리
- (8) 방사능재난 대비 구호소 지정 등 부적정
- (9)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 방재훈련 미 실시
- (10) 원자력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작업항목 누락 관리
- (11)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 (12) 원자로 및 관계시설 화재대응 부적정
- (13)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경로의 방사선환경조사 등 부적정
- (14)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터빈건물 주기적 안전성 평가 미 실시
- (15) 원전 대형폐기물 처분비용의 원가산정 미 반영

특히 감사원 보고서에 있는 울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능 방재관련 감사내용을 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구호소 지정, 구호소 지정 시 수용인원 초과해서 산정, 그리고 타 지자체와 연계한 방사능방재 대비 훈련이 미 실시 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렇게 감사원이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

>에서 보듯이 방사능방재관련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울산광역시 어떻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까.

핵발전소 사고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례를 보듯이 살아있는 생명들을 참혹하게 만들며 지역을 떠나 돌아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울산은 120만 인구와 함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화학단지 등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가적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핵발전소의 사고에 대한 방재대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사안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주에서는 핵발전소 내의 수조에 꽂차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하고자 이를 밖으로 꺼내 맥스터라는 임시저장시설로 옮겨 보관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주 월성 핵발전소는 중수로 형으로 농축하지 않은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여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배출(우리나라 전체 핵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하기에 그 양이 2020년이면 이미 포화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만년을 보관해야할 고준위 핵폐기물을 임시저장시설을 지어 돌려막기하면서 계속 핵발전소를 운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월성에 있는 핵발전소는 다른 핵발전소보다 내진설계가 떨어져 지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방사능물질인 삼중수소를 바다와 대기 중으로 내뿜고 있어 울산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청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2년 전 소변검사를 통해 삼중수소가 체내에 있는지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는 했지만 삼중수소 방사능 물질이 내 몸 안에서 핵분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삼중수소 방사능의 세기가 내 몸을 뚫고 나갈 수는 없어도 내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을 죽일 수 있고 DNA사슬을 끊고 변형시킬 확률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호르몬 작용이 높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과연 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아이들은 안전할까요. 확률적으로 핵발전소와 가깝게 생활할수록 핵발전소로부터 나오는 방사능에 피폭될 확률은 높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이 그렇고 북구가 그렇습니다. 당장에 모든 핵발전소를 멈출 수 없다면 핵발전소로부터 나오는 방사능에 피폭될 확률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30년 넘게 침묵했던 울산시민과 북구주민들은 충분히 안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부와 시민단체 핵산업계가 모여 고준위 정책 재검토 준비단을 꾸리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은 월성 원전으로부터 17km 떨어져 있습니다. 경주시청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사고는 행정 구역 단위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준위 핵폐기물 정책 재검토 시 울산시와 울산 각 구군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핵발전소와 핵폐기물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 없다면, 월성핵발전소 4기는 조기 폐쇄해야 합니다.
- 월성핵발전소 고준위 핵폐기물 돌려막기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반대합니다.

- 핵발전소사고 대응 및 울산시민 대피 시나리오 방호방재대책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핵발전소에 기대는 에너지 정책을 벗어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제 북구는 핵발전소로부터 주민들의 안전할 권리를 찾기 위해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울산시와 다른 구군보다 북구가 먼저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합니다. 예방대책도 방재대책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되도록 합니다.



5분·자유발언

결의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 > 발언의원 : 임수필 의원
- > 발언일시 : 제177회 임시회(2018. 8. 28.)
- > 발언요지 : 윤종오 전구청장에 대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 4억원은 면제되어야 합니다.

> 윤종오 전구청장에 대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 4억원은 면제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의 시대는 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지역에서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법의 잣대로 소신행정을 펼쳐나가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가로막는 것으로는 지방분권시대를 힘차게 펼쳐나갈 수 없으며 그 피해는 지방분권시대를 살아가는 영세상인과 주민들일 것입니다.

지방분권시대를 앞서 준비한 소신헌는 구청장에게 구상권 4억여원 판결은 면제되어야 마땅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1년 당시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에 코스트코 울산점이 오픈 준비를 하였습니다.

당시 인구 17만의 울산시 북구에는 이미 대형마트가 4개소나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었고, 코스트코 마저 들어서면 대형마트가 5개나 되어 전국 최고의 대형마트 밀집지역이 되었습니다.

울산시 북구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중소기업자들의 몰락이 예상되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자들의 건축허가 반려 요청이 계속되었습니다.이에 윤종오 전)북구청장은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불가피하다”며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반려의 과정은 대형마트와 중소기업의 생존권 문제가 전국으로 주목받는 사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유통산

업발전법 개정, 입점 거리제한, 월 2회 의무휴일 도입 등 상생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종오 전)북구청장은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겪어야 했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윤종오 전)북구청장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2018년 6월 대법원에서는 사상유례가 없는 70%의 구상금인 4억여원을 북구청에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윤종오 전)북구청장의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가압류에 걸려 있고, 직장이었던 현대자동차에 복직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스트코 건축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는 440여개가 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한 개 꼴입니다.

인구 20만인 우리 북구에 메가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코스트코 이렇게 5개씩의 대형마트가 꼭 있어야 하겠습니까? 4만명 당 1개 꼴입니다.

이러한 대형마트 끼리도 이익을 내지 못하는 과포화 상태의 유통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자들의 생존권은 더욱 위협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구둔화와 겹쳐 중소기업자들은 2중 3중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북구 유통환경에 대해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입점하는 모든 대형마트를 허가해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대형마트 허가가 신청된다면 이동권 구청장님은 우리 북구의 자영업자들이 한탄을 외면하고 아무런 고심도 없이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법적인 한계 때문에 대기업의 진출을 막지 못해 현재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는 이러한 고심 속에서 내린 소신행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은 이를 불법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제 어느 단체장이 법의 판결, 구상금 청구 앞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소신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윤종오 전) 북구청장만의 일이 아니라 이후 북구를 책임지게 될 모든 단체장에게 같은 무게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북구청에서 제기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은 면제되

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중소기업들과 노동계가 앞장서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구상금을 면제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와 북구청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확장하고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번 코스트코 울산점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대형마트 입점 시 현행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하고, 대형마트 입점 시 단체장의 건축허가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윤종오 전) 북구청장과 같은 소신행정의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할 것과 다시는 소신행정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5분·자유발언

결의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 > 발언의원 : 이정민 의원
- > 발언일시 : 제177회 임시회(2018. 8. 28.)
- > 발언요지 : 농소2동운동장 건립 조기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 농소2동운동장 건립 조기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는 농소2동, 농소3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농소2동 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농소2동은 대단위 공동주택건설은 물론 매곡 중산지구 도시개발을 비롯한 활발한 지역 개발로 인해 인구가 현재 3만 7천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동별 크고 작은 운동장들이 있어 다양한 행사 개최 시 주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나, 농소2동은 문화·체육인프라가 부족하여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체력증진을 도모할 운동장이 없습니다.

농소2동의 냉혹한 현실은 자체행사를 개최할 만한 운동장이나 시설이 없어 타 동의 운동장이나 학교시설 등을 대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역시 생활체육 동호회나 각종 체육활동을 위해 멀리 떨어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산 매곡지구까지 생활권이 넓어지면 체육시설 이용에 더욱 불편함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동권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소2동 운동장의 빠른 건립이 필요합니다만, 농소2동 운동장 건립 예정 부지인 오림이들 신천동 670-1번지 일원은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이유로 몇 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유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10,000㎡ 이상)

해제 대상으로 1차 협의부서인 시에서 식량 생산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매우 높은 우량 농지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소2동 운동장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현 이동권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답변 내용을 보면, 시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중앙부처를 방문 협의를 통해 농소2동 운동장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와 협의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권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북구 주민을 대표하여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이기에 그 책임감은 무겁고 업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농소2동 운동장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합니다.

이제 제7대 이동권 구청장님의 취임과 더불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농소2동 운동장 조성 속도를 높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시청과 구청, 중앙부처와 간막이 행정을 없애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만족과 섬세한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5분·자유발언

결의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 > 발언의원 : 정외경 의원
- > 발언일시 : 제177회 임시회(2018. 9. 10.)
- > 발언요지 : 고헌 박상진의사 서훈 격상운동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 고헌 박상진의사 서훈 격상운동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학창시절 역사시간을 통해 힘들었던 일제강점기를 배웠습니다. 그 고난의 시대, 투쟁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 또한 배웠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람이 김좌진 장군이었습니다. 만주 청산리에서 5천명도 안되는 독립군으로 3만명이 넘는 일본군을 물리쳤던 청산리 전투는, 어릴적 우리에게 자긍심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좌진 장군이 만주에서 싸우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만주의 독립운동을 위해 김좌진 장군을 만주에 파견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김좌진 장군이 만주를 휘날릴 수 있도록 지원한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울산 북구 출신인 걸 아십니까? 그 사람이 대한광복회의 초대 총사령, 박상진 의사입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는 1884년 바로 여기 울산 북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법조인이었습니다.

명석한 머리로 법률, 경제, 국제법 등 신학문을 수학하고 일제강점기 첫 판사 시험에 통과해 평양재판소 판사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판사임용을 거절했습니다. 눈 앞에 놓인 입신양명의 길이 조국의 명이 아니기에 망설임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 길로 조국을 떠나 만주에서 망명활동가들을 규합하고 독립운동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후 그는 국내로 돌아와 상덕 태상회를 설립하여 해외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 독립운동의 연락망과 거점들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여 초대총사령으로 전국 곳곳의 독립운동가들을 위한군자금 확보 및 지원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1918년, 일제에 체포되어 4년의 옥고 끝에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하셨습니다. 그의 활동과 이력을 보았을 때, 국가로부터 충분히 대우받아야 마땅하나 그의 서훈 등급은 고작 3급입니다. 박상진의사는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김좌진장군을 만주에 보내고, 독립운동사에서 “광복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큰 발자취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잊었습니다. 울산 시민들조차도 박상진이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북구 주민들도 박상진을 잘 모릅니다. 그는 국가와 국민, 모두로부터 잊혀졌습니다. 다행히도, 그를 기억하기 위한 기회의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울산에서 출발했습니다. 2008년에 시작한 ‘창작오페라 박상진’이 재미와 교훈을 모두 잡아내며 울산 시민들에게 11년째, 박상진을 알리고 있습니다. 북구는 송정에 53억원을 투자해 ‘박상진호수공원’을 조성하며 그의 이름을 우리 고장에 남겼습니다. 또한 LH에서 박상진의사 생가 일원

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북구는 ‘박상진 의사’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멍니다. 특히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광복회 부사령 김좌진 장군의 서훈은 1등급이지만,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의사는 3등급입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훈법이 개정되어 이 정의로운 사람이 훈격 상향되어야 합니다. 상훈법 개정을 위해 지난 6월 선출된 우리 지역의 이상헌 국회의원이, 국회의 최전선에서 “이는 부당하다.” “이는 정의롭지 못하다”며 국회를 설득하고 있고, 지역의 각 원로들이 함께하는 범시민운동본부도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웃과 주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린 아직 그를 잊지 않았고 국가도 그를 잊지 말아야하며 소리쳐 주셔야 더욱 정의로운 나라를 향해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나고 자라, 이 한반도를 위해 피눈물 흘리며 옥고로 돌아가신 박상진 의사에, 보은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북구 의회가 나서야합니다. 저부터 시작해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주민과 이웃들에게 박상진을 알려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천안시는 유관순열사 서훈등급 상향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훈 등급 격상이 이뤄지도록 동참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북구청의 역할도 막중합니다.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주민자치회 등 주민과 맞닿는 민원의 공간에 서부터 학교, 회사 등 대형 기관에 이르기까지 아직 박상진을 잘 모르는 우리 구민과 이웃들에게 그를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과 이동권 구청장님이 하 공무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잊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윈스턴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였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할 때입니다. 내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울산북구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함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독립운동의 탁월한 업적을 남긴 고헌 박상진의사에 대한 서훈등급이 그대로 머물러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과 긍지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북구주민과 북구청, 북구의회회의 힘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5분·자유발언

결의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 > 발언의원 : 박상복 의원
- > 발언일시 : 제178회 제1차 정례회(2018. 10. 5.)
- > 발언요지 : 강동동 현안문제에 강력한 대처를.

> 강동동 현안문제에 강력한 대처를.

강동산하지구는 2005년 유럽풍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목표로 ‘국제 금융위기’로 사업이 일시 중단 됐다가 2014년 푸르지오1차를 시작으로 입주가 되면서 신항주거 지역으로 발돋움하는 동시에 인구는 2014년 1월 기준 4,502명에서 2018년 6월 말 기준 15,195명으로 3배 이상 급증 했습니다.

이렇듯, 상주인원의 증가로 외형은 커지고 있지만 생활 인프라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천혜의 환경에 대해 ‘강동 브랜드의 거짓 자존감’마저 느끼게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동의 문제는

첫째, 초등학교의 학생 과밀화에 따른 학습권 침해입니다. 집행부는 초등학교 문제는 ‘교육청 소관입니다’라는 상투적인 대처가 아닌, 당장 내년부터 도래하는 교실 수 부족 해소를 교육청 등 관련 부문에 강력히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강동초등학교는 6학년은 네 학급, 5학년은 여섯 학급으로 운영 중이나, 19년 입학 예정 인원 285명, 20년 293명으로 매년 열두 학급씩 스물 넷 학급이 필요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2년 이내 열 네 학급 모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됩니다. (cf, 21년 294명) 현재도 일반교실이 부족하여 실험 실습실 등의 특별실을 전용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강동동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생들은 양질의 학습 공간이 침해 받고 있습니다.

내년 초 산하지구의 마지막 남은 KCC스위천 582가구가 입주되면 이는 더욱 심화 예상되기 때문에 교육청과의 협의로 증축을 시행해야 합니다. 수직증축의 경우 먼지, 안전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는 바, 이를 감안하여 학부모들의 걱정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응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30~40대의 가장 관심거리가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은 아스콘 공장 관련 악취 문제에 대해 주민은 북구청외 기댈 곳이 없는 절박함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9월 19일 민원 해결 간담회 등 집행부의 많은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민원 해결을 지나치게 집행부에 의한, 집행부를 위한 패러다임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민의 불만과 고통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크릿 소스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인 역학조사 및 악취 시료 조사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아스콘 공장의 악취는 바람, 온도, 습도 등의 기상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상시 측정 할 수 있는 시스템 강구를 당부 드립니다.’ 강동은 인근산업단지나 공장이 전무함에도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발생으로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오명은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악취 오명이 자꾸 거론되면 안 그래도 떨어지는 집값에 또 하나의 이유를 더 할까 걱정하는 주민간 갈등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아이 더 낫아라 하지 말고, 잘 기를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달라’라는 어느 할머니의 외침을 구청장님은 분명히 간담회 때 들었을 것입니다. “무늬만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해양 복합도시”가 아닌 내부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셋째, 2007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10년 넘게 준공되지 못한 강동산하지구의 조속한 준공을 요청 드립니다. 집행부 역시 여러 채널을 통해 올 연말까지의 준공 승인을 약속한 만큼 그 동안 6차례 준공 연기 사항을 꼼꼼히 따지고 예비준공 검사 보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준공 승인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는 강동산하지구 주민에게도 북구청이 관리하는 쾌적한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관광 특구 등 거창한 구호가 아닌 잡초가 없고,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으며, 공원이지역이 우범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지금 당장 주민이 소소하지만 확실히 행복해 하도록 하는 것이 강동브랜드를 높이는 길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자녀 고등학교 통학을 위해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셨다는 어느 어머니의 하소연, 부족한 어린이 집으로 인해 5살 난 딸아이를 통학차에 매일 쪽잠을 자게하면서 화봉동으로 보내야 한다는 30대 주부의 걱정, 아이가 아파도 제대로 믿고 보낼 병원 하나 없어 직장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데려다 달라고 반차를 사용하게 했다는 어머니의 목소리, 자전거와 오토바이로 모듈단지에 출근하고 싶어도 31번 자동차 전용도로 외 마땅한 도로가 없어 곡선구간이 많고 밤길에 위험한 옛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어느 근로자의 호소 등을 그저 별난 몇몇의 불만으로 치부해선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하나 해결해야 할 강동의 숙제입니다.

내부에 거주 하는 사람이 만족 못하는 정주지역에 어찌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시 찾고 싶은 강동으로 만들겠습니까?

저는 어느 하나 쉬운 것 없는 강동 현안 개선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께 김연대 시인이 지은 ‘상인일기’의 한 구절을 소개 합니다.

‘상인은 오직 팔아야만 하는 사람, 팔아서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 사람, 그러지 못하면 가게 문에다 묘지라고 써 붙여야 한다.’

이는 상인의 소명과 혼(魂)에 대해 이야기 한 내용입니다. 상인이란 단어를 공무원으로 바꾸면 바로 여기 계신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의 소명과 혼이 됩니다. ‘오직 주민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이란 소명으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는 따뜻함과 차분함이 있는 행정을 기대 합니다.



5분·자유발언

결의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 > 발언의원 : 임수필 의원
- > 발언일시 : 제178회 제1차 정례회(2018. 10. 5.)
- > 발언요지 : 울산 북구도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자.

> 울산 북구도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자.

남북이 분단 된지는 73년, 한국전쟁이 발발한지는 68년이 되는 올해에 남과 북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난 후 5월 26일에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9월 19일에는 평양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은 분명 분단의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려 주는 징표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긴 세월 이산의 아픔으로 서로의 생사조차 알 수 없고 희미한 기억에 의존하며 그리움을 달래 왔던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희망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판문점 선언은 분단되어 적대시로 살아왔던 이 시대의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행복을 비추는 섬광이 되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첫 번째로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들입니까.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세 번씩의 만남을 가지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격스럽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는 트럼프 대통령 외 대북적대세력이 있어 북미관계의 개선에 암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정보와 판단을 미국 정부 내의 관료들의 판단보다는 한국의 특사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핵화 조치를 더 바라는 미국의 요구에 북은 선제적 조치로

1. 핵, 미사일 시험 중지,
2.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
3.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4. 위성 발사대 해체,
5. ICBM 조립시설 해체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단체조를 함께 관람하는 15만 평양시민들에게 한반도의 비핵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얘기했고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남과 북의 민족구성원들이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선 비핵화만을 내세우며 한미군사 훈련 중단 외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치들은 북구하려면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반면 미국은 언제든지 쉽게 재개할 수 있는 조치만을 한 것입니다. 북이 비핵화의 선제적 조치로 취하는 것 만큼 미국도 안보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초기단계의 평화조치인 종전선언을 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전향적인 공동성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례 없는 남북화해와 교류가 다방면에 봇물 터질 것 같습니다. 결실이 맺어지는 가을이 왔기 때문입니다. 개벽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광역시 북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북구에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울산광역시 북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요구되는 출연금은 지난 3년 동안 단절되어 마련되지 않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창조적으로 발굴하고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마저 단절시켜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북구청은 노력해야 합니다.

부족한 출연금은 메꿔놓고 중앙정부나 광역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받아 북구 주민들을 상대로 화해와 평화의 시대에 맞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의 만남을 통해 만들어 가는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비핵화 과정이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고 우리민족의 통일 번영으로 귀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두 분의 정상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남과 북, 해외 동포의 힘이 더해져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열강의 상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울산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역할이 필요하다면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을 지지하고 북구에서의 남북교류협력과 화해와 평화를 위한 사업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분·자유발언

결의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 > 발언의원 : 임채오 의원
- > 발언일시 : 제178회 제1차 정례회(2018. 10. 19.)
- > 발언요지 : 진장명촌지구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체비지 등재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 진장명촌지구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체비지 등재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울산 북구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벌써 2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완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지난 1998년 8월 14일 허가서를 받은 이후 1999년 1월 평창토건 주식회사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06년 12월 공정을 70% 상황에서 평창토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조기 매각으로 자금이 없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구청은 미준공 사업장의 기반시설물에 대해서 이관을 받지 못해 관할대상이 아니다 보니 시설물 정비 사업비를 투입하기 어렵고 재산관리권이 있는 조합 측에서는 정비 사업비가 없어 기반시설물 관리를 하지 못해 주민들만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12년간 주민들의 법적 노력과 행정기관 민원에도 여전히 체비지 미등재로 인한 평창 리비에르 주민들 피해가 극심합니다.

첫째로, 공탁금 설정에 따른 피해입니다. 매도인이 28평형 2,000만원, 32평형 2,300만원을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공동명의로 예약하고 있으며, 이 공탁금은 수년째 묶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탁금을 설정한 채 매수했던 세대가 또 다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첫 매도인과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체 세대 3,152세대 중 소송을 통한 등기세대가 930여 세대이며, 소송을 중도에 포기한 채 개별분양 받으면서 체비지가 등재되지 않은 150여 세대가 있습니다. 전체 세대 중 1/3이 체비지에 등재되어있지 않아서 매매가 어렵고 단지전체가 가격하락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11년 평창리비에르 1차 아파트 임차인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임차인이 요청한 소유권 이전등기 요청은 정당하다"며 "임대사업자는 당초 임대주택법 21조에 근거해 승인받은 금액대로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상고판결에서, '이 사건은 법이 경제적 약자인 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공 건설 임대주택에 한정하여 '통합도산법'에서 정한 것과 별도의 임차인

보호규정을 마련한 것이 파산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균형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 제5조 제8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평창토건의 소송수계인인 파산관재인은 승인된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성립된 매매계약에 기하여 임차인들에게 해당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대지 지분에 관한 체비지 매매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올해 2월에 울산 남구는 26년간 방치돼 온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는 게 힘든 이유는 힘내서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년 간 미준공된 토지구획정리사업장 내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건설사 부도 그리고 오랜 법적 공방으로 치친 주민들이 그래도 지역사회 행복도시 사람중심 북구에서 희망을 품고 열심히 힘내서 살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에는 지속적인 것과 재량적인 것이 공존합니다. 특히, 재량적 판단에 있어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함없이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관련 이익 간 크기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균형을 달성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행정의 영역에서는 지속적인 행정행위가 많으나, 기술의 발전, 인구증가, 다양한 이익집단 등으로 인한 복잡한 구조는 재량의 범위를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평창리비에르 아파트문제가 관청의 행정사각지대로 방치되기 보다 20년 장기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북구청이 많은 유사 사례 분석 검토를 통해 보다 넓은 법적 행정재량해석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대법원이 손을 들어준 판례입니다.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비치된 평창 리비에르 체비지매매 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촉구합니다. 충분한 법적 검토, 사례 연구 그리고 토지조합과의 상호소통간담회를 통해 북구청의 위민행정실현을 부탁드립니다.



5분·자유발언

결의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 > 발언의원 : 임수필 의원
- > 발언일시 : 제179회 제2차 정례회(2018. 11. 20.)
- > 발언요지 : 노동자 동의없는 밀어붙이기식 "광주형 일자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노동자 동의없는 밀어붙이기식 "광주형 일자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노동계와 언론 지방정부 중앙정부 사이에 논쟁이 많습니다.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울산 북구의 입장에서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 무관심 할 수가 없습니다. 북구주민과 노동자들의 생활기반이 일자리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지난 2016년 말에 정립되고 2017년에 사회 협약으로 체결된 이른바 '4대역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광주시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개선"이라는 4개 의제를 핵심의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사민정 공동결의와 현대자동차 협약서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의제는 실증되고 나쁜 일자리로 창출 될 우려가 큼니다. 다음은 언론에 나온 광주형 일자리 노동조건과 관련된 11월 18일 최근 기사 내용입니다.

"4년이 지나 마련된 첫 협약서엔 연봉이 3000만원으로 명시됐다. 기본급 1800만원에 직무수당 300만원, 연차수당 100만원, 명절수당 80만원, 잔업·특근 720만원 등 이다. 웬만한 하청업체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5년간 노조 설립 금지와 임금 동결이라는 단서조항 까지 포함됐다. 협상과정에 노동계는 배제됐고, 협의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또한 생략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논의 중입니다만 연봉 3000만원, 노동조합 설립금지와 5년간 임금동결, 협상과정에서 노동계 배제, 동의 절차 생략, 노동계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의 주요내용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 노동자 전체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보면 절반 수준으로 노동자 임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임금 고노동으로 시달리는 협력업체의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은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를 늘린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로 생겨나는 소형차 생산으로 인해 울산의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올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실업자 양성과 함께 지역 경제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나타 날 것입니다.

노동계의 주장처럼 한국의 경차 시장이 14만대에 불과한데 광주형 일자리로 2021년 경차 10만대를 추가 생산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구조조정을 가져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몰락과 노동자의 탈출현상을 똑똑히 경험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으로 노동자가 울산을 떠나고 지역경제가 몰락하는 것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지역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은 울산전체의 경제적 몰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에서 보여 지듯이 노동계를 배제한 노동정책과 필연적으로 닥쳐 올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와 저임금 문제, 자동차 사업의 위기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총파업을 우려하며 민주노총을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의 목소리를 꼭 바로 듣고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와 협의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생산이 줄고 있고 수출주력사업인 자동차 수출량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필연적으로 울산지역의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실업 증가 및 지역경제의 몰락을 가져 올 것이며, 또 다른 울산형 일자리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지역 간 경쟁으로 한국경제 전체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취할 행동이 아니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및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한 정책을 노동자와 건전한 기업과정부가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역경제와 울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울산시와 북구는 이 문제를 수수방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올바른 방향에서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노동자가 존중받고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노동자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형식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위해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분·자유발언

결의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 > 발언의원 : 이정민 의원
- > 발언일시 : 제179회 제2차 정례회(2018. 12. 21.)
- > 발언요지 : 북구버스터미널의 신설과 농소2·3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촉구합니다.

> 북구버스터미널의 신설과 농소2·3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촉구합니다.

저는 오늘 포항, 경주, 울산 해오름동맹의 관문인 우리 북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북부버스터미널 신설과 관련하여 조속한 대책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울산의 버스터미널 현황을 살펴보면 삼산동에 위치한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방어진과 언양에 시외버스터미널 등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인구 20만이 넘었고 국도7호선, 오토밸리로, 옥동농소간도로 등 해오름동맹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간선도로와 도시외곽순환도로 신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량 증가와 교통수요증가는 이미 예측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북구 주민들의 공공교통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공용터미널이 울산 도심의 중심부인 삼산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되어 있으나 도심내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반나절 생활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우리 북구는 해오름동맹의 관문이며 전국을 소통하는 관문으로서의 도로축이 형성되어 있고, 교통수요 측면에

서도 북구에 공용터미널 신설 여건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소2·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소2·3동에서는 1990년대 건축법 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공동주택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1990년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되다 보니 주차 공간이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파트 안과 주변은 온통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실태를 살펴보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화재나 기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우리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 받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단독 주택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오래된 공동주택과 주변을 포함시키는 등 현재 시급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5분·자유발언

결의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 > 발언의원 : 박상복 의원
- > 발언일시 : 제179회 제2차 정례회(2018. 12. 21.)
- > 발언요지 : 자동차 부품산업 전담부서를 신설하자.

> 자동차 부품산업 전담부서를 신설하자.

“한 놈만 팬다.” 코미디 영화의 대사입니다. 패야 할 놈을 정해놓고 다른 놈을 제쳐두고 그 놈만 죽자 사자 패기 위해 달려듭니다. 현 정부가 기업을 대하는 상황과 오버랩이 되는 이유는 왜 일까요? 기업가는 무진장 맞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수익구조가 취약한 탓에 이제 회사 운영이나 투자는 그만두고 회사를 팔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는데, 울고 싶은 데 뺨 때려준 것이 바로 최저시급인상,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기업 부담 정책이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한 생산현장까지 만연한 비싼 ‘촛불청구서’를 들고 있는 고임금 비효율적인 노조활동으로 인해 미래를 위한 투자는 엄두도 못 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통상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

매출 얼마 증가, 수익 얼마 증가’로 수립하지만 내년도 지상과제는 ‘생존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 정부는 도덕적 우위를 장악한 자의 부풀려진 자신감으로 현장의 목소리엔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닌 저녁만 있는 삶이 되고 있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북구는 세계적인 자동차회사가 소재한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근로자들은 높은 연봉을 바탕으로 소비를 순환하면서 건강한 중산층 생태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산업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그 산업이 위기를 맞이하니 아파트값 하락 뿐 아니라 심지어 ‘시장통의 콩나물이 팔리지 않는다.’ 할 정도로 심각한 나비효

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제대로 된 기업하나가 중요하다
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다시 우리 북구를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대우 받는 중산층이 튼튼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도상에 '자동차 부품산업 전담부서'
를 신설해야 합니다.

자동차 튜닝 및 봉제인력 양성, 중소기업 기술, 경영개선 등 기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자동차산업 관련 정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기획적인 측면으로 북구 소재의 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북구에는 연간 150만대의 완성차를 지원하기 위해 부품을 만들고
물류를 담당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
부품사가 잘 되면 북구의 살림살이와 경제가 좋아집니다. 북구만의
자동차 부품산업 전담부서는 현대자동차에 부품의 납품하는 중소
기업 및 사출, 용접, 금형 등 뿌리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노동특보 한 분의 채용이 아닌 수소차 및 전기차 대량양산에 따른
친환경차 부품 전담자, 노동문제 및 근로자 권익문제 전담자,
다양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맞춤형으로 설계·지원하는 전담자,
튜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커스터마이징 전담자, 자동차 서열방
식 특성상 북구에 집중 소재한 서열납품 중소기업 지원 담당자 등
매일 자동차 부품산업만 고민하고 지원하는 전문화된 전담조직이
있어야만 빠르게 변화는 자동차 시장에서 낙오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북구가 존재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얼마나 많은 지원 유인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하지만 북구는 있는
기업이라도 관내에 남아 건강하게 경영만 되더라도 생산 유지, 고용
확대, 자본 축적에 따른 기술개발 등 지역 경제 활력을 주고 장기적
으로 세수 증가로 이어져 부유한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가 등장하게 되면 차 안에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는 콘텐츠 중심
으로 패러다임이 변합니다.

차량 생산대수도 엄청나게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단행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하드웨어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곳으로 이를 지
금부터 경쟁력 있게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가 수소, 전기 등 환경차로 바뀌면 부품 생태계도 바뀝니다.
지금의 중소기업은 스스로 연구하고 미래 트렌드를 따라가기에 너무
힘듭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와 학계, 현대자동차, 중견
기업의 연구개발조직, 노동계와 경영자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합니다.

전담부서를 통해 강동 해안과 산악을 이용한 오프로드 체험장 추진
을 건의 드립니다. 환경이 사고를 지배하는 법입니다. 오프로드장이
있으면 ATV, 4륜, 바이크 등 드라이빙 스쿨 운영과 체험형 프로그램
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급성장하는 튜닝
사업의 '악의모드 테스트장' 운영으로 중소기업 부품 신뢰성 검증과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완성차, 부품사의 후원 대회 개최를 통한 강동 브랜드
위상 제고가 가능한 만큼 산업기반形 관광컨텐츠 개발로 활동적
인 북구 이미지 구축될 것 입니다.

존경하는 20만 주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578년에 창업한 사찰과 신사, 불각
건축을 담당하는 일본의 '곤고구미'(金剛組)라는 건설회사입니다.
일본은 1,000년 이상된 기업만 해도 20여개에 이릅니다.
모두들 중소기업입니다. 우리 북구에도 후손에게 자랑 할 수 있는
강소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집행부는 친 기업적 분위기를 만들어
야 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기(氣)가 살면 경제 생태계가 활성화 됩니다.
기업은 적폐가 아닙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유발하여 사회가
선 순환되게끔 하는 가장 이상화된 시장경제주의 시스템의 한 축입
니다. 지금처럼 기업의 투자여지가 꺾이고 자유가 억압되며 반기업
가 정서가 팽배해 진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의 팽배
한 기업만 패는 '반기업가 정서' 대신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
에서 일하는 사람을 춤추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가 정신
이란 노동자와 상반되는 자본가나 경영자만 뜻하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 오너쉽을 말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이 잘 나갈 때 한국은 정책의 실패로 홀로 경기
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의 세계 경기 하강 신호가 더 뚜렷해지
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85%를 해외에서 벌어들인데 내년이
얼마나 더 힘들지 현장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투자는 심리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담조직이 있는 지자체가 되도록
집행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준다면 북구 중소기업에게 좋은 시그
널이 될 것입니다. 시장에서 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자동차 부품산
업을 10년 이상을 경영하면 국립묘지에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그만큼 산업현장에서 애국적 마음으로 직원들과 목숨을 걸고 어렵게
일하는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2018년 하반기 포토의정



제7대 북구의회 개원식 (2018. 7. 1)



제7대 북구의회 개원식 (2018. 7. 1)



제174회 임시회 (2018. 7. 1)



2018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018. 7. 6)



드림하이 명랑운동회 (2018. 7. 7)



의원 역량강화 교육 (2018. 7. 12)

2018 PHOTO Council



공무원노조 복구지부와의 간담회 (2018. 7. 16)



제175회 임시회 (2018. 7. 17)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 현장 방문 (2018. 7. 20)



아이스버킷 챌린지 (2018. 7. 20)



제177회 임시회 (2018. 8. 28)



의정 연찬회 (2018. 8. 16)



2018년 하반기 포토의정



제176회 임시회 (2018. 8. 20)



제177회 임시회 (2018. 8. 28)



강동설다리축제 (2018. 9. 1)



건강버스 및 건강관리센터 개소식 (2018. 9. 3)



울산안전체험관 개소식 (2018. 9. 4)



천곡천 생태하천사업 복원 현장 방문 (2018. 9. 7)

2018 PHOTO Council



울산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2018. 9. 7)



북구노인복지관 행복식당 배식 봉사활동 (2018. 9. 10)



풀베기 현장 봉사활동 (2018. 9. 17)



의원 예산 교육 (2018. 9. 28)



제178회 제1차 정례회 (2018. 10. 5)



북부소방서 개청식 (2018. 10. 11)



2018년 하반기 포토의정



제1회 북구청장기 그라운드 골프대회 (2018. 10. 11)



제18회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2018. 10. 14)



제19회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2018. 10. 16)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2018. 10. 18)



자동차산업의 미래와 일자리 대응방안 토론회 (2018. 10. 19)



강동사랑길 및 해파랑길 걷기대회 (2018. 10. 20)

2018 PHOTO Council



구군 선출직 등반대회 (2018. 10. 20)



제5회 울산 북구 책잔치 (2018. 10. 27)



제17회 효자 송도선생 효사상 고취 시상대회 (2018. 10. 27)



산불진화 대응훈련 (2018. 11. 16)



제179회 제2차 정례회 (2018. 11. 20)



제3대학 제11기 졸업식 (2018. 11. 27)



2018년 하반기 포토의정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 현장 방문(2018. 11. 29)



강동문화센터 개관식(2018. 12. 3)



적십자회비 전달(2018. 12. 5)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프로그램 성과보고 및 발표회(2018. 12. 5)



자원봉사 대축제(2018. 12. 6)

| 북구의회 실시간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 |



○ 서비스 개요

-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모든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PC,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의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주민들에게 북구의회 의사 진행과정을 생방송 및 녹화 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

○ 서비스 내용

- 북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생방송
- 북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녹화영상 영구 제공

○ 접속경로

북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kgu.ulsan.kr>) → 인터넷방송 메뉴 클릭 → 메인화면 ON-AIR 메뉴 클릭 → 해당일자 본회의의 목록 클릭 → 영상화면 내 재생버튼 누르고 시청

※ 짝 찬 화면 시청 방법

- PC : 영상화면 하단의 전체화면 마크 클릭
- 모바일 : 스마트폰 가로로 회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 민원상담 안내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하여 주민의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 수 09:00 ~ 18:00 (토, 공휴일 제외)
방 법 민원인과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직접 상담 또는 현장방문
내 용 각종 민원 불편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 각종 여론 수렴
※ 의원 부재 시에는 의회사무과(5층)에서 접수
전화 : 241-8973 팩스 : 241-8979

농소1·강동·송정동	효문·양정·염포동	효문·양정·염포동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2·농소3동	농소2·농소3동	농소2·농소3동	비례대표
							
의 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이 주 언	백 현 조	임 채 오	박 상 복	정 외 경	이 정 민	임 수 필	이 진 복
사무실 : 241-8900 010-9173-4432	부의장실 : 241-8910 010-3801-8364	사무실 : 241-8920 010-4844-5405	사무실 : 241-8960 010-8630-4918	사무실 : 241-8960 010-5535-2362	의장실 : 241-8940 010-2833-1929	사무실 : 241-8930 010-3801-8364	사무실 : 241-8990 010-4228-898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5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북구의회의 주인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북구의회는 주민여러분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의회방청을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간단히 의회사무과에 신청하시면

회의진행과정을 생생하게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의회사무과(241-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새시대를 열어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5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